

시론



박노식 시인·시엔영 원장

한낮은 바람이 불어도 햇빛 덕분에 나뭇잎이 떨어지지 않지만, 그늘 안으로 들어가면 차가운 기운이 들어서 어깨가 움츠러든다. 산중의 바람은 그늘을 좋아해서 그 속에 오래 머무르며 노닥거리는 걸 즐기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산중에 적응하려면 바람의 속성과 바람이 자주 출몰하는 시간과 장소를 알아둬야만 그를 미워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인간이 어찌 바람의 생각을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겠는가. 바람은 또한 짓궂은 행동을 즐겨하므로 온산과 들판의 단풍들을 일찍 떨어뜨리고 땅 위의 낙엽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거나 한 방향으로 몰아붙이기도 한다. 거리를 걷다 보면 아름답게 물든 잎들이 흠뻑한 바람으로 인하여 심하게 부대끼니 나머지 마치 돌가루처럼 부서져 모퉁이에 움크리고 있는 장면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알 수 없는 것이 바람의 마음인 만큼, 사람에게도 이처럼 찬 바람과 같은 기운으로 상대를 대하는 경우를 가끔 경험하는 경우가

찬 바람과 식견에 대한 소고(小考)

있는데, 그 속에는 그의 성정이 들어가 있다. 숨어 있어서 알 수 없는 성정은 그 자신도 모르게 어떤 극적인 상황에서 바로 나타나곤 한다. 누군가 무슨 상을 탔거나 또는 누군가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순간 질투심이 발동해 당사자와 함께 한 자리마저 무시한 채 곧장 뛰쳐 나가버린다. 축하할 줄 모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이를 굳이 문단 안에서 거론하자면, 그러니까 표현을 비틀어서 말하자면, 그 이름난 시를 질투할 정도가 되어야지 그 시인을 질투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질투 속에는 미움이 박혀 있어서 서로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이다. 일반인도 역시 마찬가지다. 설명이와 유사한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그 사람의 능력을 시기해야지 그 사람 자체를 시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결국 이런 심리적 사태는 자신의 식견이 부족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행위와 같다. 우리는 이럴수록 자신의 식견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나쓰메 소세키(1867-1916)의 『인생의 이야기』(시와서, 2019, 박성민 옮김), 『담화』 편에서 〈문학담〉을 펼쳐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스스로의 식견에 반하지 않게 글을 쓰고 싶습니다. 그러나 식견이란 깊어 생각하고 깊이 수양하고 깊이 읽고 또 깊이 품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문학자는 두뇌 수양을 게을

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식견이 없는 작품은 그런 점에서 보면 가치가 없습니다. ... 때문에 학문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학문이 없다면 식견이 있어야 합니다. 어렵게 말하면 인생관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츰 햇빛이 그리워지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엇저게가 소설(小雪)이었고 다음 주에는 대설(大雪)이 바티고 있다. 이 절기 사이에 눈이 올 듯도 하여 은근히 기다려지기도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 오히려 설레는 마음보다 추위 걱정이 앞선다. 산중의 새벽은 어느덧 기운이 급속하게 떨어져 밖은 얼고 실내에는 냉기가 인다. 필자는 며칠 전에 월동 준비를 했다. 무슨 감동할 정도의 대단한 준비는 아니지만, 이 또한 추위의 식견을 통해 마련한 것이어서 매우 유익하다. 지난해에 보일러 기름을 아끼느라 밧보르고 실내 난방 전원을 꺼놔는데 동파사고로 애를 먹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거실 침대 위에 텐트를 설치했더니 외풍이 줄고 텐트 안은 미지근한 물을 마신 후의 온기가 고여 있었다. 이 텐트 하나가 필자의 생활을 변화시켰다면 도시인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외로운 답답함이 좁은 굴에서 기어 나와 먹이를 찾듯 필자의 이른 아침도 이처럼 분주하게 움직인다. 밖으로 나오니 마당가에서 한 송이 겨울 장미가 얼굴을 내밀며 반겨준다.

자치칼럼



임우진 민선6기 광주 서구청장

주민자치의 길을 열고 해매고 있다.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 민주주의의 훈련장, 대의민주주의의 보완 수단,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의 해법 등 다양한 가치와 필요성을 인정받던 주민자치의 현 정부 출범 이후 좌초되어 나갈 방향을 잃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정부 이래 역대 모든 정부가 육성해 오던 주민자치의 정치권의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법제화되지 못한 사이, 윤석열 정부는 어떠한 이유도 밝히지 않고 주민자치를 방치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기본책무를 유기한 체 정쟁만 일삼고 있는 현 정치권과 정부가 과연 나라를 책임질 자격이 있는지를 묻고 싶다. 정치권과 정부가 이러한 사이, 마을의 공동체 활동은 주민자치는커녕, 관치와 봉사관제로 되돌아가고 주민자치의 이름조차 잊혀지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과 중앙정부가 그렇다고 공동체 발전을 책임진 지자체마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자체적인 주민자치 육성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 주민자치의 기초단체장은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과 육성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활성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기초단체장이 주민자치를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과정에 꼭 인식하고 유의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제시해 본다. 먼저 주민자치 성숙발전을 위한 핵심포인트로서 육성정책에 반영돼야 할 세 가지다.

좌초된 주민자치, 기초단체장이 살려야 한다

첫째, 우리가 육성하려는 주민자치의 제도의 실시와 함께 자치 의식과 문화의 배양 등 마을공동체의 종합적인 생활양식의 변화를 추구하는 매우 복합적이고 어려운 과제로서 기초단체장의 기본책무로 돼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육성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통상적 방법이 아닌 보다 다각적, 단계적, 전문적인 전략을 필요로 한다. 둘째, 주민자치 육성은 주민자치를 정도로 운영할 수 있는 자치 의식(자발성, 자주성, 자율성)과 민주 의식, 자치역량의 함양 등에 가장 중점을 뒀어야 한다. 주민자치의 주민의 민원해결, 시설설치 등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공동체의 문제를 풀아가는 합리적 방법과 과정이 훨씬 중요한 일이다. 셋째, 자치·민주의식과 역량의 함양은 정도자치를 통해 육성된다는 점에서 정도자치 실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음으로 이상 3가지 핵심포인트의 실천을 저해하는 주민자치의 속성과 환경여건으로서 각별히 유의해야 할 3가지다. 첫째, 주민자치의 관의 지배나 의존으로부터 주민으로의 권력이동이라는 본질적 속성에 비춰 볼 때, 주민자치육성과정에서 단체장과 공무원들은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주민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또한 단체장의 주민자치에 관한 의견은 구체적 지시보다는 포괄적 방향제시, 수준과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 지시 명령보다 지도 지원, 예로 해결 등의 방식으로 접근하면서 주민의 자율적 논의를 통해 구체화 되도록 한다. 둘째, 단체장은 선거직의 딜레마적 상황에서 자치발전 저해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즉 선거직 단체장은 주민지도자 등을 자신의 정치조직으로 세력화하려고 하나, 그렇게 할 경우 건전

한 주민자치의 육성될 수가 없게 된다. 즉 주민지도자는 정치적 활동을 할 수밖에 없고, 마을문제는 주민들의 자치적 논의는 생략된 단체장과 직접교류와 정치적 해결에 의존하게 돼 주민의 자치 의식의 성숙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단체장이 주민지도자를 정치조직화 등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정도의 주민자치육성은 어려운 일이다. 셋째, 우리의 후진적인 정치와 일당독점의 지역정치가 지역사회에 많은 피해를 유발하고 주민자치 성숙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즉 세력확대가 최대의 목표인 정치가 공동체를 분열시켜 주민통합을 추구하는 주민자치의 건전한 활동을 저해하게 된다. 또한 지역독점 정치는 비판기능 약화, 다양성 상실로 지역쇠퇴를 가속시키고, 지역적 과제의 자치적 논의 체계가 붕괴되어 간다. 단체장은 이런 정치환경에서는 자치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폐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즉 자신의 정치와 선거로 인한 지역사회와 주민자치의 분열갈등을 막고 이를 지켜내겠다는 도덕성과 애郷심을 발휘해야 한다. 이상처럼 단체장은 주민자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육성의지로 주민자치를 육성하려고 해도 처해 있는 정치환경이 매우 취약해 주민자치를 성숙시켜가기가 쉽지 않다. 관건이 되는 것은 현실정치 속에서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성과를 좌우하게 된다. 지역과 주민의 이익에 따른 것인가 자신과 당파적 이익을 따를 것인가에 달려있는 것이다. 직에 연연하기 보다는 당당하게 정도를 걸어 모든 지역민에게 사랑받고 영원히 이름과 명예를 남기는 길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

독자투고

도박이란 불확실한 사건의 결과에 돈이나 가치 있는 것을 걸고 승패를 가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확률에 기반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중독성이 매우 강하다. 특히 청소년기에 도박에 빠지게 되면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고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도박은 더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치명적인 위험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학업 저하 및 대인관계의 악화이다. 도박 중독으로 자연스레 학업에 소홀해지고 학습능력이 저하돼 성적은 떨어지고, 도박 중독으로 경제적인 어려

청소년 도박,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움이 생겨 가정에 어려움을 초래하며,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게 된다. 둘째, 정신건강이 악화된다. 도박으로 인해 돈을 잃거나 사회적 관계가 파괴되면서 심한 우울감, 불안감을 느끼고 자책감에 시달리게 한다. 셋째,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도박으로 인한 다툼으로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될 수도 있다. 또래 집단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을 쉽게 받는 청소년기의 특성상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우리 아이가, 내 친구가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지는 않는지, 불법 행위 관련 권유는 받고 있지 않은지 지속적인 관심과 청소년들에게 도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과 홍보,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이 필요하다. 청소년 도박,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이다.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허아록·고흥경찰서 경무과>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説

세계자연유산 전남 갯벌 보전 컨트롤타워 차질 없길

유네스코가 신안과 보성, 순천 등 전남지역을 포함한 한국의 갯벌을 2021년 7월 세계자연유산으로 인증했다. 해당 면적은 총 1천284.11㎢에 달하며, 신안군이 1천100.86㎢로 전체의 85.5%를 차지한다. 전남도는 2022년 10월 해양수산부 공모를 통해 갯벌 보전원을 유지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하지만 건입이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 실시설계 용역 지연이 그 이유다. 해수부는 2023년 11월 사전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같은 해 12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 올해 10월 끝낼 예정이었으나 조달청의 설계 적정성 검토가 늦어지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됐다. 이는 신안 압해읍 일원에 조성되는 보전원은 당초 1년간 실시설계 후 올해 11월 착공, 2026년 12월 완공하고 개관은 2027년 1월로 예정돼 있다. 돌아보면 유네스코 인증도 만만찮은 과정이었고, 보전원도 전복 고창군, 충남 서천군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했다. 실시설계와 적정성 등 절차를 밟아야 하겠지만 서둘러야 한다. 또 전남

도가 의욕적으로 수립해 추진하는 ‘갯벌 보전·관리 종합계획(2025-2029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속도를 내야 한다. 종합계획은 보전·관리 체계 구축, 생태계 복원, 생태관광 활성화, 갯벌 우수성 확보와 협력체계 등 4개 분야 29개 사업으로 9천228억원 규모를 투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순탄하게 진행되면 지역 내 2조 7천216억원의 생산, 1천74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되는 미래 비전이다. 320억원 국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원은 생태조사, 교육정책 수립, 보전활동 및 대내외 협력사업 등 체계적 보전을 위한 컨트롤타워다. 특히 유네스코와 약속이다. 착공 지연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도 최대한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 해수부 또한 목표대로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기대에 부합했으면 한다. 전남 갯벌의 국제적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공식 개관 일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전남도 역시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공사 지연에 따른 간접비 줄소송 광주시 대책 세워야

광주시가 자체 발주한 공사를 둘러싸고 소송이 속출, 전전긍긍하고 있다. 시공사가 공기가 연장되면서 원가 외에 투입된 인건비, 장비대여료, 사무실 임대료 등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때문으로, 지난해부터 제기된 간접비 소송만 5건이나 된다. 예산 부서가 적극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시의회는 조언하고 있다. 먼저 광주 용두-담양 대전 고속도로 확장 공사는 예산 부족으로 토지 보상이 10개월 가량 미뤄졌고 공사 기간도 2년 5개월 늦춰져 소송이 제기됐다. 양측은 최근 조정 합의로 소송을 마무리했다. 이밖에 서창천 고향의 강 설계 변경으로 인한 지연, 봉선배수지 토지 보상과 지장물 이설 지연, 노사동반장지원센터 공사 중단, 무등경기장 국민체육센터 공사 중단 소송은 진행 중이다. 광주시가 제때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아울러 보상 지연, 설계 변경,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지체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이라서 소송 역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추

진 중인 건설공사 63건 중 일시 정지된 사업은 월전로-무진로 도로 개설 등 3건이며, 완전히 중단된 사업과 다른 부서의 사례까지 합한다면 간접비 소송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광주시 재정을 더 압박하는 모양새가 됐다. 잇따른 소송에 따른 세금 부담은 물론이고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도 계속되고 있다. 행정력 낭비도 심할 수 밖에 없다. 자칫 부실 시공에 대한 우려도 불거지고 있다. 더군다나 정부의 긴축 기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넉넉하지 않고 경기 침체가 겹쳐 건설업계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그냥 손 놓고 바라만 볼 수 없는 상태에 놓였다.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길어지면서 간접비 분쟁은 최대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 막대한 비용이 누적해서 쌓여가는 구조다. 광주시가 진행하고 있는 공공공사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 또 사전 예방과 함께 효과적인 대응 등 합리적 개선방안에 착수해야 한다.

그래픽 뉴스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도 폐지...건축 규제 다 풀어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한 규제가 폐지된다. 정부가 지난해 발코니 설치에 이어 올해 바닥난방 제한까지 폐지하면서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었던 규제가 전부 사라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이달 28일 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이 금지돼 있다가 2006년 전용면적 60㎡까지, 2009년엔 85㎡ 이하까지 할 수 있도록 풀렸다. 바닥 난방 금지는 2021년 120㎡ 이하까지 완화됐다가 3년 만에 아예 사라지게 됐다. 120㎡ 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과 발코니 확장 면적을 합친 85㎡ 아파트 실사용 면적과 비슷하다. 바닥난방 제한 폐지는 올해 말 개정 건축기준 고시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부터 그간 금지했던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기도 했다.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과 달리 인동 간격 제한이 없어 건물 간 간격이 좁기에 정부는 발코니 설치를 제한했었다.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으나 아파트처럼 확장할 수는 없도록 했다.

-연합뉴스

오피스텔 건축기준 변화
2006년 이후 기준

	업무부분비중	발코니·옥실·설치	바닥난방
2004년 6월	70% 이상	발코니·옥실·설치 (크기 3㎡ 이하)	바닥 난방 금지
2006년 12월		발코니·옥실·설치 (크기 5㎡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까지 허용
2009년 1월			옥실·설치 제한 폐지 발코니 금지
2009년 9월	발코니·옥실·설치 제한 폐지	전용면적 120㎡ 이하까지 허용	
2010년 6월			
2012년 8월			
2021년 11월		발코니·옥실·설치 제한 폐지	바닥 난방 제한 폐지
2024년 2월			
2024년 11월			

연립뉴스

자료: 국토교통부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烈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마케팅본부 경영지원부 사업본부 업무국	650-2099
	정치부	650-2030	사신부	650-2080		650-2070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650-2011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650-2007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1991)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